

# 광주시 예산편성 시민참여 이뤄질까

### 시의회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준비 "지역민 관심·폭넓은 의견수렴 병행돼야"

올해부터 광주시 주요 정책사업과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1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영남(민주·서구 3) 의원과 홍인화(민주·북구 4) 의원은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광주시장이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공개모집 또는 구청장 추천, 예산 전문가 등 시민 100명 이내로 구성되며, 광주시의 업무 분야별로 실·국 분과위원회로 운영된다.

또한, 위원회의 예산편성 심의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시민참여예산협의회를 두고, 시민들의 효율적인 예산 참여를 위해 광주시는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 등을 교육하는 '예산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이밖에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시민참여예산 연구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두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문가 의견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시의회 행정자치 소속 시의원들과 광주시 예산담당관, 전남대 복문수 교수, 참여자치 21 오미덕 사무처장 등이 참여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 사무처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조례제정 과정에서부터 공개적인 방식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홍보와 의견수렴의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난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됐지만, 소통과 주민 참여 확대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가 되고 있다"라며 "예산 편성단계에서

시민의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제도적인 장치 마련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토론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광주시 시민 참여 기본조례'안을 오는 2월 열리는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각종 위원회 회의자료와 내용 및 결과를 공개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공모제 또는 추천제 등을 통해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따라서 이 두 조례안이 오는 2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광주시의 주요 정책사업과 예산 편성 등에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전북도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된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협의회'(회장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는 18일 오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SOC 지원 등 지역현안사업 3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 “여수박람회 예산 지원 특단 조치를”

### 호남권 광역의장단협 대정부 건의문 채택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협의회(회장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는 18일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SOC 지원 등 지역현안사업 3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과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호서 전북도의회 의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회의를 열어 ▲5+2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인 LED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 ▲LH 공사 전북 이전 ▲2012 여수세계박람회

SOC 예산지원 등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1년4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지난해 정부예산 처리과정에서 박람회 관련 예산이 기대만큼 반영되지 못했다”라며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반영 등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호남권 선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LH 본사가 경남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으로 이전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2011년도 정부 예산안 날치기 통과와 관련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이 2011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로, 특정 정파의 이해 관계에 의해 확정된 2011년도 예산안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시도간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에 국비 1천억원

### 지역 일자리·투자확대 취지

올해 지역 일자리와 투자를 확대하는 지역기업의 대형 프로젝트에 국비 1000억원이 지원된다.

지식경제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18일 양재동 이엘 타워에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사업 계획을 밝혔다.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은 시·도의 간막이식 지역산업 지원에서 벗어나, 시·도 간 공동

협력사업을 통해 광역 차원에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늘리려는 취지의 사업이다.

지경부는 올해 이 사업에 국비 1000억원과, 그에 상응한 지방비 및 민자 1000억원을 합쳐 모두 2000억원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과제당 국비 기준은 30억~50억원을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방비·민자를 함께 투입해 3년 간 최대 300억원 사업비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2개 이상의 시·도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지방비로 분담하고 민간 부문도 현금 출연 15% 이상을 포함한 25% 이상의 자금을 출연하도록 해 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경부는 4월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며, 중소기업 컨소시엄이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형 과제를 추진하는 사업자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北 구제역 발생” 첩보

북한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징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북측 지역에서 지난해 말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첩보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도 “방목한 일본인 등으로부터 북한에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군 부대 등을 동원해 전국적으로 소나 돼지 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일본 내 대북인권단체인 ‘구출하자, 북한 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의 이영화 대표는 이명을 요구한 ‘북한 내 소식통’을 인용해 평양시 강동구 구만리에서 구제역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북측은 구제역 발생 여부에 대해 공식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에서의 구제역 발생 및 이와 관련한 대북 지원 여부에 대해 “구제역 발생 징후가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상황을 예단에서 지원 여부를 말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구제역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구제역 방역 약품 22종과 방제장비 29종 등 총 26억4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연합뉴스

## “신도시 개발보다 구도심 재생 에너지 낭비 대신 녹색성장”

### 국토종합계획 전면 수정

신도시 건설보다는 구도심 재생,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 에너지 낭비보다는 절감을 통한 녹색성장 등으로 국토 및 도시의 미래전략이 전면 수정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최근 5년 간 국토공간 변화를 반영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의 수정계

획(2011~2020년)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이달 중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이 확정되면 광주시와 전남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이번 수정계획의 가장 큰 변화는 과거 성장·투자 중심의 국토 및 도시의 패러다임이 사실상 폐기되고, 관

리·지속가능성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지식산업에 따른 유연한 토지이용의 확대, 중앙과 지방간 협약을 통한 지역개발 등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 것도 이번 수정계획의 특징이다.

우선 광역시를 비롯한 거점도시들은 도심·역세권의 고밀 개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대중교통지향형 개발(TOD), 사가지 내 미이용지 우선 개발 등을 통해 ‘한국형 압축도시(Compact City)’를 지향하게 된다. 또 교통인프라는 철도·해운 중심으로 재편하고 복합환승센터 설치, 간선급행버스(BRT) 설치 등을 통해 대중교통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에 필요한 시설도 대폭 설치된다.

/윤현석기자 chadad@

## 멜라트銀 서울지점, 北 무기대금 수금?

### 위키리크스 보도 파장...당국자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

북한이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으로부터 무기수출 대금을 송금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위키리크스 관련보도가 외교부에 파장을 낳고 있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은행이 북한의 무기수출 창구로 이용된다는 의혹은 이례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자칫하면 이란과 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국내 기업들의 활동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노르웨이 일간 아프텐포스텐이 16일(현지시간) 공개한 지난 2008년 3월 24일자 미국무부 전문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1월 이란 내 기

업인 ‘홍콩일렉트로닉스’가 이란 내 파르시안(Parsian)은행 계좌에서 총 250만달러를 세 차례에 걸쳐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으로 송금했다.

홍콩일렉트로닉스는 북한 무기수출의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인 북한 단천은행의 ‘페이퍼 컴퍼니(장부상 회사)’여서 이 대금은 북한이 이란에 수출한 각종 무기의 판매 대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대금은 모두 유로화로 송금됐으며 이중 150만달러는 중국 및 러시아 내 계좌로 빠져나가는 등 북한이 무기판매 수익을 회수하는 데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이용한 것으로 전문은 기술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멜라트은행의 북한 송금에 대해서는 우선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정부의 확인결과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북한 송금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상황이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에 따르면 이미 미국 국무부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의혹이 불거지자 내 계좌로 빠져나가는 등 북한이 무기판매 수익을 회수하는 데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이용한 것으로 전문은 기술했다.

/연합뉴스

온가족을 위해 건강한 제품을 약속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온 가족이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제품을 약속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국가대표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  
비타민하우스와 함께 하세요.

비타민은 비타민하우스 www.vitaminhouse.net / 대표전화 1588-8529

남성 휴대용  
실물과 똑같은 내여자

[꿈꾸는 공주]  
내 여자가 장만에 화제다 얼굴이며 몸매가 모델을 뺄지 않는 거기에다 흔들며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머릿결 보드랍고 말랑거리는 피부 광택 나는 눈동자 가슴과 신체 부위가 실재한데 키는 1m50이 되며 섹시하니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린다. 분능적인 성욕을 해소하면 정신 건강에도 유익하고 '성'명예 예방도 되니 내여자가 인기발로 불리며 난다.

※ 8만원 상당의 선물과 휴대용 가방도 드립니다.

(식약청 USA 통관제품)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30대부터 80대까지 지구력이 당당해 지므로 선택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농협 02302-469931(정의철)  
생노병사 불노정생 책을 드립니다

사이텍 070-7786-6631 010-6306-7070 (미쓰고) 070-7786-9710 010-7102-7070

정품! 정량!! 난방유  
SK삼보주유소

마일리지카드 발행 (인적사항 기재 없음)

명품 외부 세차! 깔끔 내부 세차!  
차량 무료점검 서비스 시행 Speed Mate와 업무제휴

난방유 할인판매  
▶ 현금결제시 우대  
▶ OK로고 있는 전 카드 할인혜택  
▶ 한도당 4천원~6천원 할인  
▶ OK캐시백적립

내부세차합니다

산수오거리에서  
자산(법원) 큰사거리 지하 200m우측  
062-224-5189  
011-666-7899